

창간기념 포럼

# 통일정책과 남북경협



- 사 회 신창민 (중앙대 교수)
- 주제발표 김용호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토 론 김영일 (통일원 교류협력국장)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성춘 (한국일보 논설위원)  
이영선 (연세대 교수)  
이용환 (전경련 이사) 〈가나다 순〉



김중웅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앞으로 발간될  
「통일경제」라는  
전문지가 국민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정책입안자에게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어서 영원하는  
분단조국의 통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사회** 우선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에서 월간 「통일경제」를 창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를 기념하는 뜻에서 창  
간기념포럼을 갖게 된 것을 뜻깊  
게 생각합니다. 먼저 포럼에 앞서  
서 김중웅 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중웅 원장**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새로  
취임한 지 4~5개월 됩니다만 저  
희 연구원의 경영이념 혹은 사업  
추진방향을 크게 네 가지로 설정  
했습니다.

첫째는 연구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전문분  
야 혹은 인력의 제한 때문에 모든  
문제를 전부 다룰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력의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외부 연구진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연구력을 극대화하겠  
다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저희의 연구내용을 정보  
화하고 그것을 상업화하는 것입니  
다. 정보내용을 연구기관끼리 공  
유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차별화 문제로서, 어떻  
게 하면 그 많은 연구 중에서 창조  
적인 차별화에 의해서 바람직한  
연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차별화 전략의 하나로 마케팅 리  
서치, 오피니언 서비스에 관한 여  
론조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모델의 개발이나 경제  
정책의 이론적 연구와 더불어 실  
제 경제정책의 파급효과라든가 특  
정정책에 대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피부 경제를 살  
펴봄으로써, 이론과 실재를 접합  
하는 접근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넷째는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연구를 하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경영방향을 잡았습니다.  
특히 국민에게 봉사하는 연구원의  
업무 중의 하나로서 저희가 통일  
경제센터를 저희 연구원 내부에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가지 큰 민족적  
인 또는 역사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경제  
적으로 선진경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  
면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  
시에 분단조국의 현실을 극복하여  
통일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분단 고개를 넘어서서 통  
일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우리 세  
대가 직면한 가장 커다란 도전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저희 연구원에서는 북한  
경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  
분들에게 발표하는 장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큰 일을  
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여론

조성도 하고, 또 충분한 연구와 분석을 토대로 학자들을 돕는 방법의 하나로서 95년 1월부터 「통일경제」라는 전문 간행물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사계에 계신 저명하신 전문가들을 모시고 통일경제에 관한 포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저희 연구원의 앞으로의 연구방향이라든가 앞으로의 경영방향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발간될 「통일경제」라는 전문지가 국민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정책입안자에게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어서 염원하는 분단 조국의 통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전문지가 되어서 각계에 도움이 되는 잡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앞으로도 좋은 말씀과 질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간단히 인사말씀에 대하고 앞으로 계속 성원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남북한문제 전문가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용호 교수님께서 먼저 발제를 해 주시고 그로부터 출발해서 토론해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실 주제는 「통일정

책과 남북경협」입니다. 주제의 범위가 크고 넓기 때문에 자칫하면 공허한 토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정부의 통일의지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갖게 됩니다. 경협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정부의 태도는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 않은가 합니다. 북미 핵협상이 타결됨에 따라서 종래 경협과 핵문제를 완전히 연계시켰던 것을 완화 시킨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식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도 아니고, 또한 핵문제와 경협문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경협에 관한 논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하게 되면 현실과 동떨어진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력통일을 배제한다고 가정할 때, 결국 남북간의 접촉으로부터 통일은 시작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쌍방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교류 협력을 통한 통일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신창민  
중앙대 교수

“경협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정부의 태도는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 않은가 합니다.”

렇다면 경협을 언제 어느 만큼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정책적으로 정부가 결정한다 하더라도, 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 시킨다면 무엇보다 어떻게 해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논의는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역시 우리 내부에서 경제교류협력이 통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그 의미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아직도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경협을 아직까지도 기본적으로 핵문제와 연계된 하나의 카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자리에서 과연 그게 사실인지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김용호 박사님께서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부족하시겠지만 대략 15분 정도로 우선 요약 을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론하시는 선생님들께서 10분 정도씩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진했던 말씀들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우선 김용호 박사님께 발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의 김중용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이 모임을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발제를 맡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있는대로 첫째 통일정책을 우선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두번째로는 남북경협의 현황, 문제점 그리고 추진방향에 대해서 가능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마지막으로 남북경협의 현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위탁 가공무역의 활성화라는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단기적인 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키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일정책을 남북경협과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남북경협의 여부와 방향이 우리가 어떤 통일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무력통일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남북경협이 부의미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통일의 목표, 통일국가의 이념과 제도, 통일방안 그리고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통일의 목표가 민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이 되어야지 통일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

니다. 통일을 절대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 무력통일도 정당화되기 때문에 민족의 희생을 강요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국가의 이념과 제도로써 남한의 자본주의가 아니고 북한의 사회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일국가의 이념과 제도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방안으로서는 흡수 통일방안, 연방제통일방안, 중립국 통일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방안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통일방안의 경우에는 남북경협이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통합, 사회통합을 우선시하고 점진적으로 정치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제 남북경협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간접교역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가장 큰 특징은 위탁가공무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991년에 처음 남북한 위탁가공교역이 시작되었을 때는 12만불에 불과했습니다만 1992년에 52만불, 1993년에는 433만불이고 1994년 10월말 현재는

1,568만불로 전년에 비해서 네 배 내지 다섯 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교역에서 위탁가공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는 4%에 불과했습니다만 올해는 남북한 전체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8%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정경분리원칙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 경제교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이고 또 본래의 목적과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 경제교류가 경제논리에서 추진되어야만 하고, 경제논리라는 것은 결국 남북한에 상호이익이 되는 보완의 차원에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민족경제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장기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경분리 원칙을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는 대북관의 차이로 인해서, 특히 김일성 사후 북한의 붕괴 가능성 또는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대북정책에 혼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점진적인 통일이 바람직하다면 북한을 붕괴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북한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일



**김용호**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통일방안으로는  
흡수통일방안,  
연방제통일방안,  
중립국통일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방안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통일방안의 경우에는  
남북경협이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성을 지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런 경우에 남북한 경협도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앞으로 남북한 경협에 있어서는 기업이 앞장을 서고 정부는 지원하는 이러한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점진적이고 단계별로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남북한 교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현재 경제상황이라든지 주변상황이라든지 따라주지 않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역의 단계에서 자본 기술 협력의 단계, 경제통합의 단계, 경제통합 이후에는 남북한 산업조정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는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북한 교역이 재작년부터 1억 9천만불 내지 2억불에서 정체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북한의 구매력이 상당히 약하여 남한에 반출할 상품이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역상품을 많이 개발하고 남북한의 합작사업의 경우에도 많은 것을 개

발해 나가야 되는 이러한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남북한 교역은 직교역이 아닌 간접교역이고 또 구상부역의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산거래방식으로 했을 때 교역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러한 것은 남북한 당국자간에 무역협정이나 금융협정이 맺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공업 위주의 소규모 투자에서 대규모 투자로 가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래에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전용공단의 창설이라든지 경제협력지대가 마련되고, 나아가서는 남북한이 제3국에 공동투자할 하고 공동 진출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 상황에서 남북경협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통신이나 수송이나 통행의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가장 긴급한 과제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남한과의 경협에서 오는 정치적인 취약성 또 사상적인 오염, 이런 것을 완화하는 방편의 하나로서 다자간 경협창구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UNDP의 두만강개발계획에 참여

함으로써 한국이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러시아의 자본이나 기업들과 같이 진출하는 것은 북한에게도 부담이 적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UNIDO도 북한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간접지원하는 것도 다자간의 틀에서 대북한 경제진출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이 확대됨으로써 중소기업이라든지 위험부담(risk)이 많은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장기적인 남북경협 추진 방향을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현 단계에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위탁가공무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탁가공무역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역과 투자의 연결고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은 구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북한 교역을 확대시키는 데 한계가 많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대북투자를 통해서 북한으로부터 수입할 상품을 북한에서 생산해야만 교역의 확대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남북한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합니다. 투자보장협정이라든지 이

중과세방지협정이라든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 제도라든지 이러한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위탁가공무역을 위험부담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 남북한 경제의 상호보완성이라는 것은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 한국의 자본과 기술인데 특히 우리의 섬유, 신발 등 경공업 분야의 유희설비를 활용하여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시켰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 자체도 위탁가공무역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에는 작년 약 1억불에 가까운 섬유제품을 북한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3년 북한의 전체 수출 중에서 철강이나 철강 관련 제품이 31%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위탁가공 의류수출이 21%로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당국도 직접투자나 외국인 기업의 활동에 따르는 사상적인 문제라든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후유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원자재나 생산설비를 외국으로부터 제공받고 자기네들이 경영을 해서 자기네가 가공을 한 후에 교역을 하는 것이 정치, 사회적으로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과의  
경협에서 오는  
정치적인 취약성 또  
사상적인 오염, 이런  
것을 완화하는 방편의  
하나로서 다자간  
경협창구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위탁가공무역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첫째는 현재의 위탁가공무역을 한국에서 15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기술인력의 방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품질향상이라든지 품질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생산기술지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품질검사담당, 생산기술지도, 생산설비운영의 실무급 기술요원의 방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북한의 무역업체와 직접 접촉을 통해서 위탁가공무역을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홍콩이나 북경의 중개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위험부담이나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생산설비의 대부분 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생산설비는 섬유를 비롯한 경공업분야에서도 상당히 낙후되고 노후한 편입니다. 일본에서 최근에 들어온 것 외에는 상당히 생산설비가 노후하기 때문에 우리의 섬유, 신발분야의 유희설비를 북한에 반출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로는 남북한 작수송로를 개설해야만 위탁가공무역을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북한과 남한간의 운송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과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는 인천-남포간의 해상운임이 20피트 짜리 컨테이너로 1,100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홍콩까지의 해상운임은 같은 20피트 컨테이너가 400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너무 많아서 경쟁력이 약합니다.

위탁가공무역을 활성화하는 마지막 방안으로서는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거나 또는 수출보험공사의 보험 부고를 통해서 기업의 위험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우선 이 정도 말씀드리고 또 토론과정에서 빠진 것을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 고맙습니다. 사회의 입장을 많이 생각을 해 주셔서 부리하게 빨리 말씀을 끝내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기회를 가지시도록 하고, 그러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한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춘** 아주 잘 들었습니다. 훌륭한 발제를 해 주셔서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신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발제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경제전문기자나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모처럼 불길을 잡은 경제교류 협력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개시켜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제가 남북문제를 언론 쪽에서 다루어 오면서 늘 느끼는 것은 같은 2차대전 이후의 분단국 중에서 남북한 관계가 참으로 독특하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경제관계를 대입시켜 볼 때 대체로 분단국 중에 세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경병행형(政經並行型)'입니다. 전형적인 것이 동서독 관계입니다. 동서독이 그렇게 분단 상황으로 지내오면서 1951년 베를린협약을 계기로 해서 — 물론 72년에 기본조약 이후에 본격적인 경제교류나 협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 정경(政經)을 한번도 연계시킨 적이 없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 유형으로는 대만과 중국 본토의 관계인데 이것은 공식적으로는 정경분리를 인정 안하면서 도 움성적으로는 경제교류를 양측 다 묵시적으로 인정하면서 활발하게 해 왔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직접 합작을 하고 투자를 하고 진출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40년간 주로 홍콩을 중개지로 해서 직접 부딪치기보다는 정치적으로는 대결

구조 속에서도 동족(同族) 논리를 내세워 그 나름대로 경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만에 몇 차례 가서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대외적으로는 교역 규모가 별 것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세번째 유형으로는 남북한 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남북한의 경우 처음이나 지금이나 철저하게 '정경연계(政經連繫)'입니다. 서독이나 중국처럼 공동으로 똑같이 정치적 이해, 경제적 이해를 한꺼번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은 언제나 정치적 이해추구 때문에 경제가 눌리고 밀려오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대북정협 활성화가 또다시 제기되었습니다만 언제나 분단 50년이 가까워 와도 새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에 사실상 우리 측으로 보면 경제교류나 협력에 관한 노하우(know-how)가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독일이나 중국 쪽의 경우를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어도 남북한 간에는 노하우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많은 국민들과 기업인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흥분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이것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 국민이나 재계의 모든 사람들이 코

“저는 현 단계에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위탁가공무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탁가공무역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역과 투자의 연결고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춘

한국일보 논설위원

“남북한의 경우  
 처음이나 지금이나  
 철저하게  
 정경연계입니다.  
 서독이나 중국처럼  
 공동으로 똑같이  
 정치적 이해, 경제적  
 이해를 한꺼번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은 언제나  
 정치적 이해추구  
 때문에 경제가 늘리고  
 밀려오지 않았나  
 합니다.”

게 흥분한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  
 다. 특히 경제 쪽으로 보면 1978년  
 도에 박 대통령이 6·23선언 5주  
 년 발표를 할 때 남북한이 자본·기  
 술 협력을 하자, 경협촉진기금을  
 만들자 했을 때 그때 마치 뭐가 되  
 는지 알고 크게 기대했었지요. 또  
 1984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경협을  
 제의하고 물자와 기술을 무상제공  
 하겠다고 했을 때 또 한번 흥분하  
 고, 세번째는 80년대 중반에 있었  
 던 경제회담 때도 그랬지만 대역섯  
 차례 회담이 결국 무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7·7선언 이  
 후에 정주영 회장이나 김우중 회  
 장께서 북한에 다녀오신 데 이어  
 김달현 부총리가 내려와 상당히  
 기대를 갖었고 이어 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이렇게 왔는데 그것이  
 반짝 사태로 주저 앉았지 한번도  
 본격화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김 교수님께서 위탁가공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나마 위탁  
 가공이 지난 4~5년간 조금 진전  
 이 되어 왔다는 것은 상당히 반가  
 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정경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  
 으로 말씀드리어서 정경분리는 이것  
 이 핵이나 북의 한반도 적화선략  
 이라든지 제2의 6·25 획책 기도  
 같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중대하게 판단을 해야 되  
 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옛날하

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나 합니  
 다. 앞으로 또 한번 핵 파동이 나  
 고 어떠한 남북간의 대치상황이  
 발생하여 또 다시 남북경협이 주  
 저앉고 교착되는 이런 상황은 없  
 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쪽이 큰  
 형님답게 보다 더 실질적으로 협  
 력하겠다는 뜻을 북측과 주민들,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여 줄 필요  
 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  
 니다. 지금 북한은 잘 아시는 대로  
 이중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적어도 6·25  
 이후 짧게는 7·4공동성명 이후  
 지난 22년 동안 남쪽에 대해서 그  
 야말로 거의 뜨거운 경협 의 손길  
 을 보내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교란 의도나 통일전선전략 같은  
 것은 우리가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쪽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지레 겁을 먹고 너무 모  
 든 것을 정치적인 논리로 뒤섞여  
 가지고 그동안 상당히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나 합니다. 물론 핵문제  
 도 경협으로 제동을 걸었기 때문  
 에 어느 정도 해결되어 여기까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분이 있습니  
 다만, 이제 앞으로는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경협 활성화 방  
 안을 발표한 이후에 북쪽의 조평  
 통이나 언론매체들이 남쪽을 비방

하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도나 내용 면에 있어서는 전면 거부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는 중지(衆智)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북한을 어느 정도 편안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합니다. 북한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지만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죽은 후에 후계체제가 안되는 것에 대한 뚜렷한 정보도 적고 배경 분석도 안 되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실제 북한 경제가 어렵고 심각하고 바닥 수준이고 완전히 파탄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실상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도대체 북한이 지난 정권 수립 이후 46년 동안에 하나못해 한번도 정확한 인구숫자까지도 제대로 밝힌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 가지 바람은 이왕 시작된 정경분리의 대북정책을 우리 쪽에서 또 다시 연계하는 식으로 되풀이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활성화 방향을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라도 우리가 이끌어 간다는 그런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전에 김 교수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각 국민들이 저마나 출발점에서 출발 총소리만 나면 달려나가겠다고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황무지나 마찬가지로입니다. 그야말로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뛰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정부 쪽에서 교통정리도 필요하고 충분한 자료도 주어야 되고 또 기업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서 과련정보도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관민합동으로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영선** 김 교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도 듣고 해서 대강 체제나 사후의 방향 같은 커다란 문제에는 저하고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그런 큰 방향을 보다 설득력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가지 저한테 걸리는 것을 짚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 같아서요.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이 김 교수님과 의견을 달리해서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던지지는 문제일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첫번째는 통일의 문제인데 통일이 장기적으로 어떤 형태를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 교수님께서 는 점진적이고 단계적 통일방안이 가장 좋은 것이며, 또 현실적인 것으로 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또 그



이영선  
연세대 교수

“지금 북한하고 경험해 가지고 우리가 득 보는 것이 뭐 있습니까? 기껏해야 조금은 남쪽에서 이득을 보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보아서 지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서 북한도 잘되고 민족적인 통일이 되어 가지고 세계에 한국민족의 토대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기본적 목적이 아니겠어요?”

렇게 얘기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 교수께서는 흡수통일이 아니면서 결과는 자본주의가 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북한의 체제가 평화적으로 우리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에요. 흡수통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가서 다스리게 해 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저쪽 체제가 붕괴되어 우리를 불러들인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 준다면 그것은 점진적인 것은 아니고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면 사실 저는 거기에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될 것이라고 저는 봐요.

왜 그렇게 안되느냐? 김정일이 부너지더라도 제2의 쿠데타가 나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한동안하고 이렇게 20년, 30년 그 체제가 가는 것이 아니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기독교권이라 하는 힘이거든요. 지금 엄청난 군인과 당, 이런 기독교 세력이 통일 후 자기들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한 우리를 불러들여 사

기들을 다스려 달라고 얘기할 이 유가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북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나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체제가 바뀌기를 바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측면이 분명히 있겠지만, 체제를 유지해 가는 보다 더 중요한 힘은 정치세력일 것 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세력의 생존욕구가 과연 쉽게 포기되겠느냐 의문입니다.

말하자면 점진적으로 통일해서 한 체제가 이루어지려면 제가 보기에는 중국처럼 시장제도 정도는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평화적으로 체제에 합의를 이룬다면 거기에 협상이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상당한 복지체제를 유지하 라든지 아니면 참여 경제체제로 하자고 내놓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쪽에서 남쪽에 있는 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일 점진적인 합의에 의한 통일이라면 어떤 체제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경험을 왜 하자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험을 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평화적으로 합의해서 통일할

수 있게끔 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하고 경험 해 가지고 우리가 득 보는 것이 뭐 있습니까? 기껏해야 조금은 남쪽에서 이득을 보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보아서 지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서 북한도 잘되고 민족적인 통일이 되어 가지고 세계에 한국민족의 도대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남북경협의 초점은 거기에 맞추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냥 무조건 양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목적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남북경협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시장경제제도라는 것을 맛보게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시장경제제도가 잘되면 북한 경제도 잘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주고, 시장경제제도라는 것을 배워서 자기네들 체제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경협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과연 남한기업이 북한에 가서 일하는 것을 정부가 부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보험도 해 주고 돈도 주고 납음지원도 해 주고... 저는 이럴 필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것 없이도 지금

간접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충분히 만나서 청산제도 만들고 이런 것 다 좋습니다. 직접 만나서 주어진 제도 안에서 북한이 남한기업들 보고 이렇게 해 주면 서로 돈벌이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워 가면서 자기 스스로 신용 지켜가고 신뢰관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합니다. 만일 우리가 남한기업들한테 보험 다 들어주면 저쪽에서 “아, 너희 보험 들었지?”하면서 아주 인위적인 행위를 자행할 것이라고요.

그러면 완전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소위 과당경쟁하는 것을 너희들 과당경쟁을 하지 말라고 정부가 막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위험부담을 감수하게끔만 해 주고 또 자기네들이 신용관계를 지켜 가면서 사업을 벌여가게 하면 그것이 과당경쟁을 막는 방법도 되는데 북한한테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대로 시장제도가 어떻게 움직여 가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좋은 학습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경협을 통해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성분리 문제는 원칙적으로 찬성인데 언어상의 표현 차이가 있



**이용환**

전경련 이사

“제가 보기에 경협의 일차적인 목표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북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사람들이 시장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부터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쉽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요. 제 생각에는 정경분리라는 것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리하겠다고 하는 결정 자체가 정치적 결정이 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북한하고 교류를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을 바에야 그냥 정경분리해라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풀어준 것을 다시 조이고 풀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즉 일관성만 유지해라, 혹은 좀 더 확대해 가라 하는 것이 더 맞는 얘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 경제적 논리를 더 강조하는 얘기는 옳은 얘기에요. 그것은 좋은데 정부한테 너무 정경분리해라 하면 정부는 자꾸 거부감을 갖고 우리는 여기서 빠지라는 얘기인 모양이다 생각하게 되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고 되도록이면 경제논리를 활용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칼자루 쥐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을 더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용환** 김 교수님 주제발표에 저는 거의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경협을 말할 때 너무 거창하게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경협이 진행이 되면서 적어도 민족동질성의 회복이라는 가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고 그것이 나아가서 북한 동포들에게 공존공영하는 길을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처음부터 굵고 크게 내걸어 가지고 경협의 목표가 정치적 목표처럼 이중화(二重化)되는 일은 없도록 단순하게 보아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경협의 일차적인 목표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북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시장경제를 통하여 북한과의 교류확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사람들이 시장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부터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쉽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대북관계, 남북경협 문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단기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단기적인 문제일수록 보다 길게 보면 오히려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정부의 「남북경협활성화 조치」 이후 기업들의 자세를 과연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옛날에 비수교국에 진출

할 때도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를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기본적으로 유목민족의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곳에 혹은 열사의 나라에 가서 땀흘려 그것을 개척하는 시장개척정신이 있는데 북한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단지 예외가 있다면 한 동포라는 것 밖에 특이한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시장의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현재 시장의 수요가 있느냐?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초기에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러시 현상을 보이느냐? 그것은 아마 정보 부족으로 북한의 실정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인들이 시장 파악을 위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까지나 시장이나 투자환경 조사 차원이기 때문에 갔다와서 기업인들이 어느 정도 북한에 투자나 교역을 활성화할 것인가 판단할 것입니다.

최근에 외국 기업들이 북한을 다녀왔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경쟁이나 유발한 것처럼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고 일부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저는 외국 기업들이 갔다 온 것이 시장 조사 차원의 정도이지 그 이

상의 판단은 상당히 유보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곧바로 협회나 시장개척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과정을 보면 현재는 거의 간접교역 형태의 임가공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발전이 되어 소규모 투자까지 가려면 상당 기간 상호간 거래의 축적기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고 특히 중소기업들도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북한의 사정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임가공 노동집약 산업의 경우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우리 쪽 산업의 어려움을 그쪽에서 보완하려는 단순적 시각이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임금수준은 물론 임차해 준 토지, 노동, 생산요소 전체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북한이 우리와 경쟁하는 동남아시아나 중국보다 유리한 조건이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기술인력까지를 본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단순 임가공 차원, 특히 의류부문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인정을 받은 바 있지요. 다리미질 정도만 떨어지고 중저가 품의 수출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하면 우리 기업의 대북시장 진출은 단기적 시각에서 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이루어가는 것이 기본 전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은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한편 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기술자의 방북 문제는 쉽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 측의 필요에 의하여 될 것입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의류부문의 예를 들면 물량확보를 못해 많은 공장이 놓고 있는 상태랍니다. 절대적으로 일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장이 쉬고 있는 상태를 어떻게 현상유지를 시키느냐 하는 것이 그쪽 사람들의 당면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당사자는 자기들과의 상담을 유리한 조건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동의 질도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필요한 조건도 제시하고 그러면서도 상호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 성사가 되고 그것이 발전되어 신뢰가 쌓이고 좀더 교역의 규모가 늘어나는 그러한 케이스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직간접 교역에서 임가공까지 간단히 문제점만 제기를 하면, 직간접 교역은 11월말 현재 2억불이 넘었지만 사전품질 확인 절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교역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서 2, 3개월이 소요되고 임가공무역이라 하더라도 결제문제는 상당

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북한의 정책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 일관성이 있느냐가 기업들이 걱정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특히 위탁가공의 경우 생산과정상의 점검을 제3국의 중개인에 의존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의사 전달을 받으니까 품질검사도 정확히 나올 리 없습니다. 납기가 지연되는 문제도 해결책이 요원합니다.

북한과 일본과의 거래를 보면 일본 본토 기업인과의 거래는 15%, 잘해야 20% 전후이고 나머지는 조총련계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원·부자재의 적시 공급 차질과 금융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작·합영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 밖에 북한의 법령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사회주의체제가 모두 그렇듯이 애매모호한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더라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법규라는 것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법보다 명령이 위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하면 우리 기업의 대북시장을



진출은 단기적 시각에서 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이루어가는 것이 기본 전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의 백학순입니다. 김용호 교수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경험과 그에 관련된 것에 대해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왜 우리 남한정부가 정경분리라는 정책을 써서 남북경협을 촉진시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라 할까, 논리적인 근거라 할까, 그런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오늘 김교수님께서 통일과 통일의 목표에 대해 말씀을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통일이라는 개념의 정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이라는 개념은 영토적인 통일이 포함되지 않고서는 그 개념 자체가 불완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영토적인 통일을 전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통일의 목표를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반도에서 영토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러한 통일이 앞으로 상당기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습

니다. 그 이유를 우선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째, 국제정치적 성격과 질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겠습니다. 예컨대, 국부(國富)를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큰 변화가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영토의 획득이나 통합이 국가에게 여전히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여태껏 쌓아온 경제적 부나 복지를 희생하면서까지 영토적 가치를 추구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남한의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의 기반은 이미 남한이라는 영토를 벗어나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있지 않습니까? WTO체제 하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우리 민족 전체의 앞날은 전세계적인 범위로 우리의 부를 축적하는 경제활동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둘째, 우리가 영토적인 통일을 할 수 있느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북한이 망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문제는 북한국가가 그렇게 쉽게 붕괴, 소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여태껏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 정권의 붕괴가 곧바로 통일로 이어지리라는 신화에 얽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의 붕괴로부터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김정일 정권이 망하면 바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통

“여태껏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정권의 붕괴가  
곧바로 통일로  
이어지리라는 신화에  
얽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권붕괴가  
온다 해도, 그 다음에  
체제붕괴가 와야하고,  
또 그 다음에  
국가붕괴와 소멸이  
와야하며, 그렇게 된  
다음에야 비로소  
통일이 가능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남한의  
정책담당자들이 하루  
빨리 그들의  
마음속에서부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흡수통일의 미련을  
지우고, 현실적으로  
적합하고 유익한  
정경분리 원칙하에서  
남북경협을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일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권붕괴가 온다 해도, 그 다음에 체제붕괴가 와야하고, 또 그 다음에 국가붕괴와 소멸이 와야하며, 그렇게 된 다음에야 비로소 통일이 가능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과정 자체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또 각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국내정치와 국외정치와 장(場)에서의 구조적인 변수들과 정치지도자 수준에서의 여러 변수들이 변증법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이뤄지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통일에 이르는 ‘과정’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호 교수님도 점진적 단계적 통일방안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김영삼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 김대중 아태재단이 사장의 3단계 통일방안, 그리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등 단계적 통일방안이 협상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각각의 단계를 넘어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권력관계의 재구성을 포함하는 극히 정치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 각각의 통일방안이 상정하는 1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셋째로, 북한 국내정치의 장을

보면, 현 통치 엘리트들이 모든 규칙의 제정, 해석, 그리고 모든 자원의 배분을 독점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불리직 강제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사회의 사고방식이 1990년대의 남한의 사고방식과 비교될 수는 없고, 그것이 오히려 남한의 1950, 1960년대의 사고방식에 가까운 상태라고 본다면, 북한에서의 불리직 강제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치적으로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북한 통치엘리트들이 군대와 경찰을 효과적으로 장악하는 한 정권유지에 커다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통치자들은 오랜 동안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폐해로 인한 생산력의 저하로 초래된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북한의 국가형성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북한 통치자들의 위기관리를 보면, 그들이 통치 노하우(know-how)와 외교 노하우와 더불어 정책적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의 신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김일성의 남북합의서 채택, 유엔 동시가입, 남북한 정상회담 재의와 김정일의 핵카드 사용을 보면, 북한의 통치 엘리트들이 정치노선과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신축성을 가지고 있고 유연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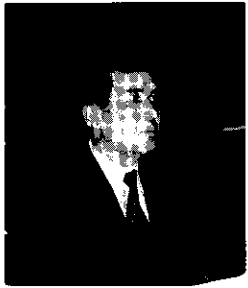
민사회의 성장이 억제되어 있는 북한과 같은 체제에서 통치엘리트들의 사고와 판단의 신축성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지요. 김정일이 김일성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신축성이 있는 것인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으나, 그가 지도자 수업을 받는 과정에서 그러한 신축성의 중요성을 많이 배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의 통치자들이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변환시켜 궁극적으로 경제적인 소생을 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국외정치에서의 외교력과 국내정치에서의 정치력은 실제에 있어서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통치엘리트들의 총체적인 정치력의 양면이라고 볼 때, 북미회담의 타결에서 드러난 북한의 외교력의 수준은 북한의 통치엘리트의 정치력의 수준을 반영한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북한의 국외정치환경을 보면, 북한은 새 지도자의 등장과 유리한 국제환경의 열림이라는 '새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주변 4강이 모두 한결같이 북한의 존속을 바라고 또한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가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대외정치환경을 맞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북한과 같은 소국(小國)에게는 외부로부터의 영향의 성격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북미회담의 성공적인 타결로 인하여, 미국은 북한의 안전보장과 북한에게 서방세계에로의 진입 허가 도장을 찍어 준 셈이 되었고, 이제는 서방세계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태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북한국가가 쉽게 붕괴, 소멸되지 않을 것 같고, 따라서 한반도의 영토적 통일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인데, 너무나 북한이 현재 김일성 사망후의 어려운 고비를 일단 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통일이 당장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對)북한 정책을 써야 할 것인가? 영토적인 통일이 당분간 어렵다면, 남은 선택은 남북한간의 우호적인 공존의 기반 위에서 언젠가 맞을 통일의 날을 위해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우리의 국부를 확대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지요. 북한의 정책결정 과정에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렛대가 거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정부와의 꾸준하고 성실한 직접 접촉을 통해 어떤 영향을 미쳐 우리의 이



**김영일**  
통일원 교류협력국장

“이번 조치는 남북경협을 북한 핵문제와 연계시켜 온 정부의 일관된 입장의 토대 위에서 제네바 합의에 따른 상황 변화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에 남북경협의 장래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익을 보상하는 방법과 미국, 중국 등의 제3국을 통해 우리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추구하는 방법을 동시에 적절히 결합하여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의 방법은 남북한 상호간의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고, 제3국을 통해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후자의 방법은 이미 사용해 보았으나,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고 그에 합당한 일관성 있는 정책과 태도를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성실한 접촉을 통해 신뢰를 쌓는 바탕 위에서, 북한과 대화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확대하고 우리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북한 경제협력이 이러한 방향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협의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의 차원에서 평화적인 상호공존을 받아들이는 일이고, 대북한정책의 차원에서는 정경분리를 취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한의 정책담당자들이 하루 빨리 그들의 마음속에서부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흡수통일의 미련을 지우고, 현실적으로 적합하고 유익한 정경분리 원칙하에서 남북경협을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김영일** 주취측에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이번 정부의 남북경협활성화 조치와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을 위주로 말씀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논문 발표하신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해 온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던 관계로 발표논문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제자가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통일정책은 민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이나 민족동질성 회복 등 기반조성이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조성은 남북한간의 ‘접촉을 통한 변화’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가능하며, 이러한 ‘접촉을 통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바로 남북교류협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교류협력은 통일정책 추진이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이니만큼 여러 가

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남북 교류협력 문제, 특히 오늘의 주제인 남북경협이 단순히 경제논리에 의해서만 추진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유감스럽게도 북한이 대남(對南) 적화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대남 비방을 계속하고 있는 현 상황과 남북관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대북정책에 있어 정경분리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여러 선생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철저한 경제논리에 의해서 대북 경협을 추진한다면 남북한의 경제구조가 수평적 분업관계가 아닌 수직적 종속관계로 변질될 위험성이 크며, 또한 이것은 남북한 주민간의 반감을 증폭시켜 민족공동체 의식을 실종케 하는 반대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경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은 남북당국간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지금보다는 조금 진전된 상황에서는 몰라도 현 단계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남북경협의 분제점으로 발제자가 지적하신 사항들은 매우 적절한 사항들이라고 보며, 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남북한

투자보상협정이란지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향후의 과제로서 분류해 놓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남북경협의 추진방향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정도로 범주화하는 것이 그 추진의 우선순위와 시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고, 둘째는 북한당국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셋째는 당국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11월 8일 정부가 초보적인 단계의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를 발표하면서 그 내용으로서 기업인 방북, 위탁가공 활성화, 소규모의 시범적 경협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현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리고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경공업 위주의 소규모 투자라든지 북한내의 사무소 설치, 제3국에서의 북한 노동력 고용 등은 지금까지 우리 기업인들과의 접촉과정에서 어느 정도 북

“어쨌든 북한쪽 사람들이 하는 스타일은 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정부와 기업 사이를 분리도 시키고 이득도 취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고민밭」을 통해서 이쪽 저쪽 서로 엇갈리게도 하고 입북료라고 해서 거래의 돈을 받는다 하는 등 재미없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한측으로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조치는 남북경협을 북한 핵문제와 연계시켜 온 정부의 일관된 입장의 토대 위에서 제네바 합의에 따른 상황 변화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에 남북경협의 장래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남북경협정책이 북한 핵문제에 종속되어 이에 따라 추진된다는 말씀은 아니며,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서 남북경협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자면, 제네바 합의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미 또는 북일관계 개선이라든지 남북한 관계 또는 북한 내부의 사정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 조치가 취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다자간 경협창구 활용문제는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 단독 투자보다는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특히 UNDP를 통한 두만강개발계획과

UNIDO를 통한 협력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사회** 토론 중에 새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혹시 꼭 보충할 말씀이 있으면 아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춘** 김 교수님께서 통일정책과 경협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가 다 관련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저는 경협 쪽을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정경분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북관계라는 것이 앞으로도 예측불허인데 어느날 갑자기 내치상태가 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끊어질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피해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국가전체나 남북전체로 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8일 정부가 밝힌 경협활성화 방안도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그런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소규모적으로도 단계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로 조심스럽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용환 이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이번에 그야말로 미지

“이제는 경제를  
가지고 북한하고  
관계개선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북한체제를  
무너뜨리거나  
뒤흔들어 놓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 지역을 진출하는 차제라면 결국  
국 합동조사단 형식으로 먼저 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  
니다.

어쨌든 북한쪽 사람들이 하는 스  
타일은 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정부와 기업 사이를  
분리도 시키고 이득도 취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고민밭」을 통해  
서 이쪽 저쪽 서로 엇갈리게도 하  
고 입북료라고 해서 거액의 돈을  
받는다 하는 등 재미없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이렇게 첫 경험 쌓는 의미에서는  
조건과 환경을 탄탄하게 하고 들  
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  
니다.

아까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북한의 경제실태나 하다못해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외국인투자법  
과 기업법, 합영·합작법 등을 몇  
번 훑어봐도 우리가 가서 활동하  
는 것을 저 사람들이 혹시 자유의  
바람 같은 것이 들어올까봐 나진·  
선봉지역 외에는 못 나가게 할 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평  
양 근처나 대도시 근처로 진출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런 것이 한꺼번에는 될 수 없다 하  
더라도 나진·선봉지구에 정부대  
표나 일부 인사들은 갔다 왔지만

직접 참여해서 투자할 분들이 가  
서 본다는 것은 그 만큼 뜻깊은 일  
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정확하  
게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자면 북한  
의 GNP나 일인당 소득도 다 각  
기관이나 연구소마다 통계가 달라  
서 300불, 500불, 600불 어디는 2,  
3년 사이에 2,500불로까지 나옵니  
다. 하지만 정확한 통계는 없는 실  
정입니다.

제가 두달 전에 독일정부의 인  
사와 식사하다가 그 얘기를 한번  
물어봤더니 사실 자기네도 동독이  
동구에서 가장 경제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통합되고 나서 두  
경을 열어보니까, 20년간 어느 분  
단국보다 열심히 교류를 해 가지  
고 나 안다고 자부를 했는데 상당  
히 헛짚었다고 하더군요. 정확한  
통계를 제대로 하나도 맞춘 것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에게 하나의 좋은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는 경제를 가지고  
북한하고 관계개선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  
은 이것을 가지고 북한체제를 무  
너뜨리거나 뒤흔들어 놓겠다고 하  
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경험활성화의 의의중의 하나가 남  
북간의 직접 접촉, 관이든 민이든  
직접접촉에 큰 의의가 있다면 그

“결국 영토적 통일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셨는데, 그것  
 자체도 현실적으로  
 보면 맞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통일의  
 가능성을 너무 배제할  
 필요는 없지 않거나  
 합니다.”

런 뜻에서 북의 실상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쌓이게 되면 우리 쪽에서도 마음놓고 투자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하고 수교 전부터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했는데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계법을 전부터 쪽 만들고 개정된 것을 제가 보니까 중국 것을 거의 베끼다시피 했더군요. 믿을 수 있는 것은 중국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70년대 초 일중(日中)수교 후에 일본 기업들이 들어갔다가 혼이 나서 실패하고 나온 이후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서기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중국의 정확한 법규, 법체계도 모호하고 여러 가지 허가관청이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라는 것이에요. 또 간섭은 심하고 걸핏하면 기업을 뒤흔들어놓고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나라 대소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거의 비슷하게 겪고 있는 고충입니다. 따라서 장차 이것의 축소판이 앞으로 북한진출에 있어서 기업들이 겪어야 될 고충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당국이 이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영선** 지금 토론에서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백학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와 같은 의견이면서도 중국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결국 영토적 통일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셨는데, 그것 자체도 현실적으로 보면 맞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통일의 가능성을 너무 배제할 필요는 없지 않거나 합니다.

예컨대 지금 당장의 기득권 세력들에 의한 정치력, 물리적 강제력 같은 것들 때문에 통일이 안될 가능성은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결국 장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북한이라고 해서 민주적 세력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상은 없다는 말이지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가지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적어도 독일과 같은 동서독에 있어서의 선거도 장기적으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며, 따라서 시야를 거기까지 확대해 놓고 얘기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백 박사님의 생각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정경분리'라는 용어는 아무리 제가 말을 달리하자고 해 봐야 다들 그대로 사용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부에서는 정경분리 안할 것은 뻔한 것이



“기업들이 크게 애로를 느끼는 것이 창구의 다원화입니다. 지금 형식적으로는 통일원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부처로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말을 쓰지 말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정부에 계속 요구하자고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용환** 토의 중에 자유경제무역지대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나진·선봉지구 개발이 분명히 될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로 빨리 되느냐 하는 시기성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설에는 나진·선봉지역은 김일성의 유사이기 때문에 그쪽만 개방할 것이고, 나머지는 체제유지와 관련되어 개방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이 있지만 이미 남포지역과 신의주지역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투자지역의 확대는 그쪽의 필요로 체제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지역을 선정하면 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경분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한 남북경협 활성화조치가 제대로 운영되고 그대로만 운영해 주면 기업이 앞장서서 활동하고 정부는 지원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시켜 주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기업들이 크게 애로를 느끼는 것이 창구의 다원화입니다. 지금 형식적으로는 통일원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부처로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단일화 시켜서 통일원으로 일원화하고 각 관련부처가 통일원에 전문가를 파견해 연락책임도 하면서 통일원과 업무 호흡을 맞추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하고 싶습니다.

이 밖에 정보도 민간부문과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민간부문의 정보도 정부 못지 않게 많은데 정부부문에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통일원이 많은 자료를 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의미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현대경제사회연구원에서 「통일경제」를 창간하는 것도 바로 바람직한 정보 보급의 창구가 되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백학순**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랄까요? 아까 정권붕괴 자체가 체제붕괴로 가고, 그 다음에 국가붕괴로 이어져서 통일이 달성되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볼 때, 개념상, 논리상 그렇다는 것임

“정부가 지도와  
 규율을 해야 할  
 부분은, 예컨대, 이미  
 심각한 북한의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키는  
 문제라든가, 투자나  
 교역으로 빈부차이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심리적 소외감에서  
 오는 남북한 주민들  
 사이의 이질감의  
 문제, 북한에서의  
 땅투기 방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니다. 이는 통일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통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경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 기업이 투자를 할 때, 투자환경의 불확실성, 투자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의 입장은 그러한 거래비용과 기회비용 따위는 투자 결정의 정상적인 부분이니까, 손해를 보던 이익을 보던 기업에게 일단 맡기고, 정부차원에서는 경험의 진척에 따라 생겨날 것으로 보이는 부작용에 크게 신경을 써야 하리라고 봅니다. 정부가 지도와 규율을 해야 할 부분은, 예컨대, 이미 심각한 북한의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키는 문제라든가, 투자나 교역으로 빈부차이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심리적 소외감에서 오는 남북한 주민들 사이의 이질감의 문제, 북한에서의 땅투기 따위의 방지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지침을 주고 또 강력하게 규제할 것은 규제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경험 단계와 미국과 북한 양국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미국의 대북한 ‘무역 및 투자장벽의 완화’의 단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오래 전에 수립된 그들의 계획에 따라 단계

별로 그러한 완화조치를 취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대북한 경험의 단계가 미국의 대북한 경험의 단계에 한 발짝 앞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한 발짝 앞선다는 것과 한발짝 뒤진다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와의 사이의 역학관계도 있고 해서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여러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에 대해 양국 사이에 어떠한 이야기가 이미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북한 핵문제와 경험을 연계시키는 정책을 포기한 이상, 정경분리의 원칙을 가능하면 빨리 받아들여서 미국에 한발짝 뒤지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원칙만은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 아까 경험 추진에 있어서 경제논리만을 앞세워서는 안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 중의 하나는 경험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이중성과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경험을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에 최소한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이 협력기금

이 현재는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 국민의 성금이 들어오든지 다른 무엇을 하더라도 역시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되는 것이니만큼 이것은 앞으로 민족공동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당국 차원에서의 경협을 중심으로 지원해 나가는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는 경협의 초기 단계이자 실험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부의 지원만을 바라면서 기업이 자신의 능력 밖의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한다면 이는 남북 경협의 장래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과당경쟁 얘기도 나옵니다만, 과당경쟁 방지라는 차원에서도 초기 단계에서는 기업이 자기 책임 하에서 경협을 추진해 나가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수로 지원문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관계국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유동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북 경수로 지원이 우리 정부의 주도하에서 남북경협의 한 모델로서 마지막까지 추진될 수 있다면 더할 수 없는 바람이겠습니다. 또한 남북

협력기금 지원문제는 아직까지 정부의 방침이 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북 경수로 지원 절차가 확정되면 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 이외에도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계속 이 문제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회** 고맙습니다. 제가 김용호 교수님이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도록 한 것은 지금 대체적으로 볼 때 김 교수님 생각하시는 것과 두드러지게 달리 생각하시지는 않는 것 같기 때문에 모두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짧은 시간이지만 빈틈없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호** 저는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통일의 문제, 둘째는 남북한 경협의 기본목표가 무엇이나, 셋째는 정부의 역할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1세기에 영토통일(Territorial Unification)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국경없는 경제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영토적 국가(Territorial State)의 의미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토

“일부에서는 과당경쟁 얘기도 나옵니다만, 과당경쟁 방지라는 차원에서도 초기 단계에서는 기업이 자기 책임 하에서 경협을 추진해 나가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적 통일은  
디자인에 의해서만  
만들어지지 않고,  
비의도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디자인을 해도 그것이  
그대로 맞아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너무 집착을 하면 세계사의 조류에 뒤쳐질 수 있다, 따라서 저는 민족통일(National Unification)에 우선권을 두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산가족들이 자기의 고향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강한 욕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만 남한 사회에도 보면 지난 20~30년 동안의 국토개발의 결과 고향이 많이 달라지고 가족생활도 많이 달라지고 고향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통일 관련 두번째 문제로 저는 정치적 통일(Political Unification)은 디자인에 의해서(by design)만 만들어지지 않고, 비의도적으로(by default)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디자인을 해도 그것이 그대로 맞아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정치적 통일에 집착을 하다 보면 우리가 디자인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민족통일의 가치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우리가 헤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정치적 통일보다 민족통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것은 남북경협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기본목표에

대한 입장차이에 따라 정책함의(policy implication)가 상당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남북경협의 정치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나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기업이나 기업가가 주체가 된다면 이것을 조금 분리해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북경협에 있어서도 민족동질성의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결국 양자가 궁극적으로는 수렴을 하게되지만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 정부는 투자보장협정이라든지 이중과세방지라든지 분쟁조정문제 같은 것이 해결되어야 남북한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정경분리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중국하고의 경험관계를 보면 그런 것 있기 전에 더 많은 경제활동이 있었던 것을 보면 세도가 우선되어야만 한다는 논리는 그 근거가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경협의 기본목표가 경제논리에 치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충돌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는 게임인데 시장경제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런 것을 자꾸

학자들이나 기업들이 얘기할 것 같으면 북한은 중국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화평연변”(和平演變)을 해서 이 친구들이 대북 진출을 노리는 모양이다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도 장사가 되고 남한도 장사가 되니까 서로 만나서 장사를 하는 그러한 아주 소박한 출발점이 가장 기본적인 목표로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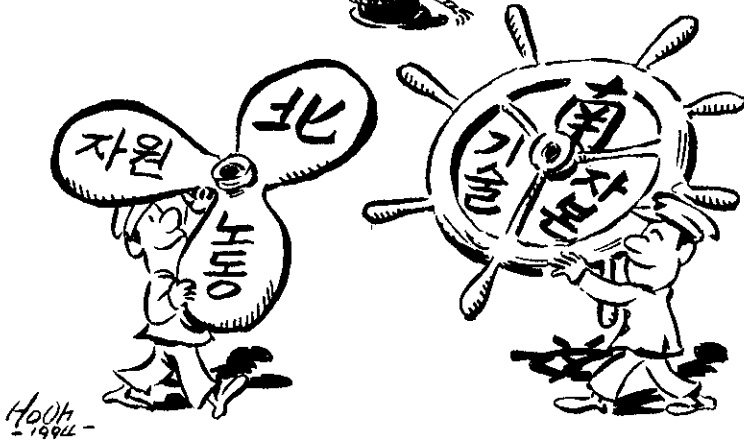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네바 합의로 미국과 북한만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경수로 지원문제나 또 다른 문제와 연계되어서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제네바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시행착오가 생기는 경우 정부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기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 사후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우리 정부가 시행착오를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고 또 핵심에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요약하는 것보다는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독자가 판단하도록 맡겨두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주제발표해 주신 김용호 교수님, 그리고 같이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중웅 원장님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통일경제 창간기념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漫評〉



“형제는 용감하였다!”